

2014년도 업무계획

희망의 새시작

국민의 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을 실현하겠습니다.

2014. 2. 17.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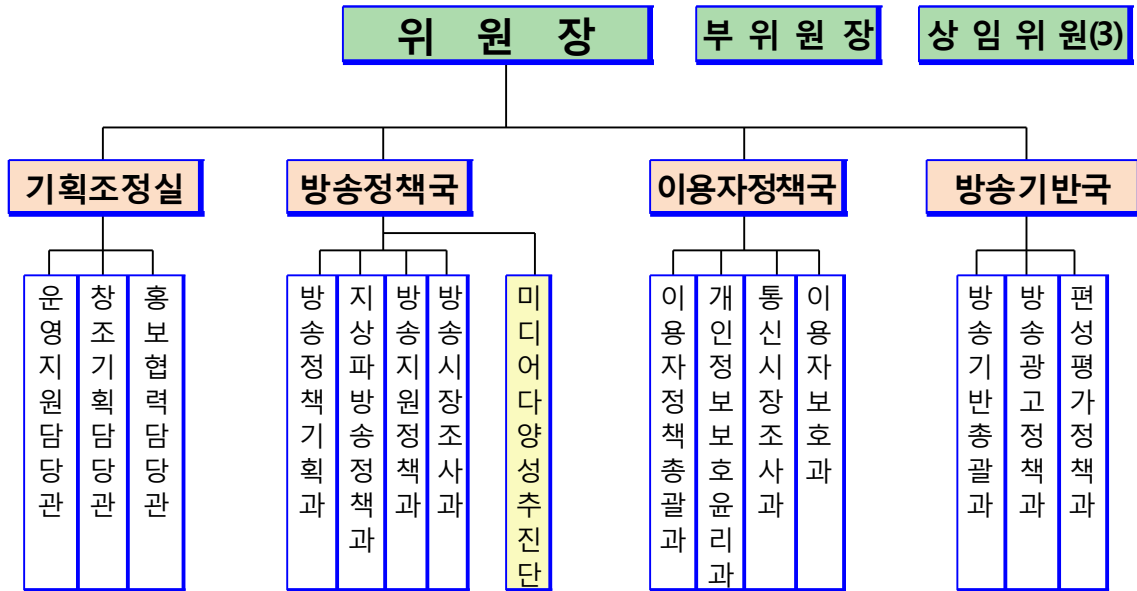
목 차

I. 기관 현황	1
II. 2014년 정책 여건	3
III. 주요 정책 과제	5
1.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6
2. 방송의 신뢰성 제고	12
3. 국민행복, 이용자 보호	17
IV. 국정과제 및 비정상의 정상화	22
V. 기대 효과	24
VI. 추진 일정	25

I.

기관 현황

□ 조 직 : 1실 3국 14과



※ 색은 임시기구

□ 인 원 : 총 204명 (정무직 5명 포함)

□ 재 정

○ 세출예산 : 총 **1,963**억원 (전년대비 73억원 감소)

- (재원별) 일반회계 507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456억원

- (기능별) 인건비 146억원, 기본경비 41억원, 주요사업비 1,776억원

○ 세입예산 : 총 **1조 1,213**억원 (전년대비 829억원 감소)

- 일반회계 : 428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 1조 785억원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미래부와 공동 관리

□ 주요 임무

-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조사·제재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 정책 수립·시행 등
- 미디어 다양성 정책

□ 부서별 기능

부 서	주 요 업 무
기획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및 예산 (기금 포함)의 종합·조정, 조직·정원·인사 ○ 공영방송 임원의 추천·임명 ○ 대국회 업무, 법무·규제 개혁, 부내 정보화 및 재무관리 ○ 위원회 정책 홍보 및 언론 취재 활동의 지원 ○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방송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 SO, 위성방송 허가·재허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전 동의 ○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제재
이용자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 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조사·제재, 방송통신 분쟁 조정·알선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송기반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언어 및 방송심의 관련 정책 수립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및 방송 소외계층 지원 정책 수립 ○ 방송광고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시행, 방송광고 균형 발전 ○ 방송편성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시행, 방송평가제도 운영

Ⅱ.

2014년 정책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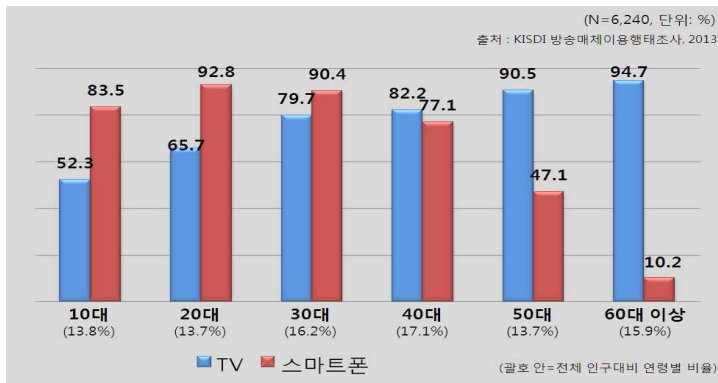
1. 방송 부문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 시청·유통이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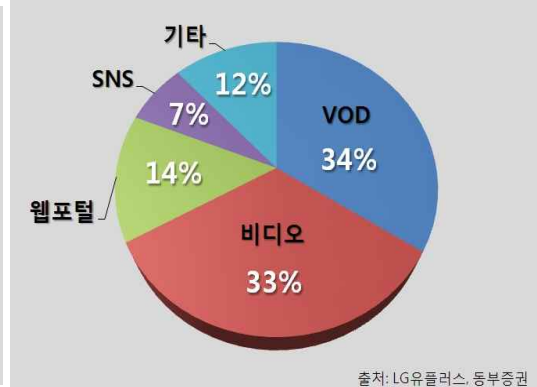
○ 모바일 네트워크 확충·스마트 기기의 보급 등으로 방송 콘텐츠를 TV가 아닌 인터넷·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청하는 추세가 증가

※ 전 국민의 43.7%는 스마트폰을 TV 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비디오나 VOD를 주로 시청

< 세대별 매체 이용 빈도(중복응답포함) >



< 모바일 트래픽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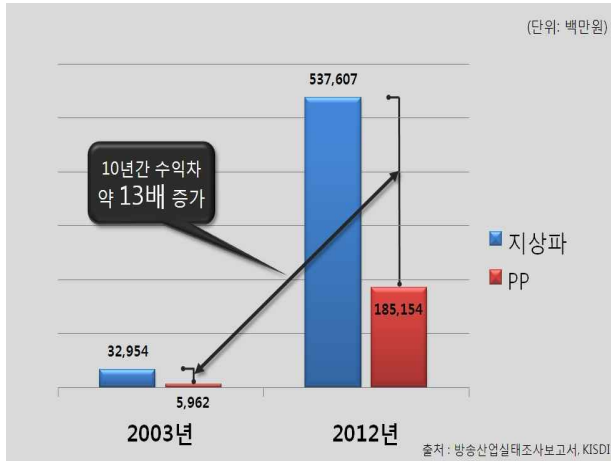
○ 전통적인 방송 매체를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가 제작·유통되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먹방 (요리·시식 방송), 공부방 (공부 방송) 등 기존 매체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콘텐츠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광고 수입 등 수익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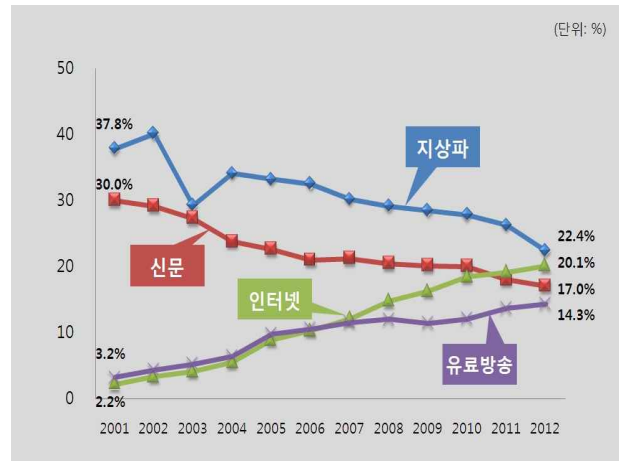
□ 원하는 콘텐츠를 보고 싶은 시간에 골라보는 매체이용환경 속에서 플랫폼보다는 콘텐츠가 매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전망

○ 지상파와 유료방송 PP간에 콘텐츠 제작 역량의 차이는 확대되는데 반하여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비중은 지속 감소

< 프로그램 판매 수익 변화 >



< 광고 비중 추이 >



2. 통신·인터넷 부문

□ 사업자간의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매출액 정체가 지속

- 이동통신은 가입자 정체 (1% 내외 증가)로 주파수 및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고, 초고속인터넷과 결합 등을 통한 가입자 유치경쟁 지속
 - 수익 창출 차원에서 자사 가입자 지키기와 타사 가입자 유입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이 활성화될 전망

※ 통신 매출액 : ('09) 43조 6천억원 -> ('12) 44조 1천억원 (연평균 0.4% 성장)

- 알뜰폰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차별화된 저렴한 요금을 내세워 가입자 수를 크게 늘리고 있으나, 향후 수익성 창출은 미지수

※ 알뜰폰 가입자 : ('11) 577,514대 -> ('13) 2,481,531대 (4.3배 증가)

□ 스마트폰 보급 확산 ('13년 보급률 : 68%)으로 인해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대두

- 스마트폰 앱 부당 결제, SNS 등을 통한 신종 스팸 피해가 증가함

Ⅲ.

주요 정책 과제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 실현



목표	정책과제
1.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자원 확보② 방송콘텐츠 기반 확충③ 미래를 향한 발돋움, 차세대 방송④ 방송플랫폼의 세계화
2. 방송의 신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② 종합편성 채널의 공공성 확보③ 보편적 시청권 보장
3.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개인정보 보호②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③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1.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방송을 통해 실현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창조 경제의 인큐베이터 역할 구현

정책
과제

- ① 제작 재원을 안정화하고, ② 제작기반을 확충하여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
- ③ 차세대 방송을 통해 선명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방송하는 한편, ④ 세계인이 우리 콘텐츠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외진출 확대

주요 성과

①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자원 확보

- (수신료 현실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공청회('14.1) 개최 및 의견청취('14.2)를 실시

② 방송콘텐츠 기반 확충

- (시청자 미디어 센터) 지방 (부산·광주)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인력 저변을 확대
- ▶ 이용자 증가 ('11년 21만 7천명 → '13년 27만 5천명)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방송 편수 증가 ('12년 539편 → '13년 595편)

- **(애니메이션 활성화)** 방송을 통해 많은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편성·시청될 수 있도록 국산·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 (0.3~1%) 대상 확대
 - ▶ 지상파방송 (5개 채널) → 지상파 + 종합편성 채널·애니메이션 PP (13개 채널)
- **(외주제작 환경개선)** 외주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외주 제작과 밀접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논의 개시
 - ▶ 고액 출연료·작가료,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
- **(광고 지원)** 혁신형 중소·벤처 기업에게 광고비 70% 할인 ('13년 178개사)

③ 미래를 향한 발돋움, 차세대 방송

- **(UHD방송)** 지상파·유료방송, 콘텐츠, 가전사 등을 포괄하는 『UHD방송 추진협의체』를 미래부와 공동으로 구성·운영 ('13. 10)
 - ▶ UHD 방송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중
- **(지상파 다채널)** 지상파 다채널 방송 (MMS)의 도입 여건 검토를 위하여 실험방송 허가 ('13. 12) 및 실시 ('14. 1)
 - ▶ 5번 채널을 통하여 KBS→EBS→MBC→SBS 순으로 '14. 3월까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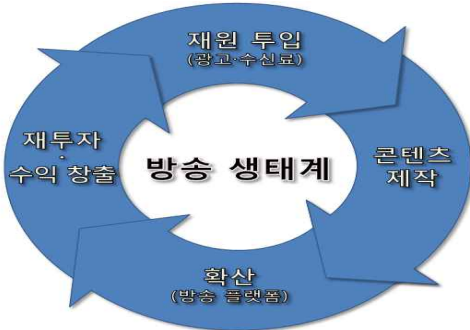
④ 방송플랫폼의 세계화

- **(방송콘텐츠 수출)** 중국 광전총국과의 프로그램 등 교류 협력 MOU 체결 ('14. 1) 및 방송포맷 등 콘텐츠 수출 지원
 - ▶ EBS는 중국 교육방송 CETV에 '모여라 덩동덩' 프로그램 포맷 수출 합의('14. 1)
- **(해외 방송채널 확대)** 미국 최대 위성 TV인 디렉TV (1,100만 가구)에 아리랑 TV 송출 합의 ('13. 12)

※ '14. 2. 20일 방송 개시 예정

장애요인 및 개선할 점

< 방송 생태계 선순환 구조 >



- 방송 생태계는 **광고·수신료** 등을 통해 조성된 **자원**으로 **콘텐츠 제작**에 투입
- 콘텐츠가 **방송플랫폼**을 통해 **확산**, **광고·콘텐츠** 등의 **수익 창출**을 통해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 **(자원)** 한정된 **광고시장**을 두고 미디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광고수입 변화를 초래하는 **광고제도 개선**은 **이해관계 대립**이 존재
 - KBS 수신료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반대에 의해 동결됨
- **(제작)** 미디어 센터는 **특정 지역 입지·수도권 부재** 등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외주제작사는 여전히 제작 여건이 열악하고, 애니메이션은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로 **심야에 편성**됨
 - ※ '12년 KBS의 애니메이션 구입비는 38억원이나 광고판매액은 0.3억원에 불과
- **(방송 플랫폼)**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난 디지털 방송기술은 **다채널·고화질** 등 다양한 시청자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움
- **(한류)** 해외 드라마의 **황금시간대 방영 제한** (중국), **독도·역사 인식** 문제 갈등에 따른 **반감** (일본) 등 **反한류 기류**가 확산되고 있고, **개별 프로그램 수출**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 한정됨

1 한류 재도약을 위한 재원 확보

- ◆ 한류 확산을 위한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기반 마련을 위해 33년째 월 2,500원으로 동결되어 온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 방송 광고 규제를 개선하여 콘텐츠 제작 여건 확충

① KBS 수신료 현실화를 통한 재원 확충

- KBS 재원이 안정되고, KBS 광고 축소로 타 방송사 광고가 증가하는 한편, EBS 교육 콘텐츠 투자가 확대

< KBS 수신료 조정(안) >

현행	조정	조정 내용
월 2,500원	월 4,000원	1,500원 인상

※ EBS 배분 비율 3%→5%로 상향, KBS 광고 '12년 대비 2,100억원 축소

- 수신료 중심의 재원구조 확립방안, 공적채무 확대·경영혁신 방안 중점 검토

② 광고제도 획기적 개선

- 방송 콘텐츠의 80% 이상을 제작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광고제도 개선 방안 강구

2 방송콘텐츠 기반 확충

- ◆ 양질의 콘텐츠 제작 기반인 외주·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시청자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
-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광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① 창조방송 허브, 미디어 센터 확충

- 방송 콘텐츠와 미디어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광역시·도에 창조방송의 거점으로서 추가 설치 ('14년 106억원)
 - 부산 ('05), 광주 ('07) → 대전·인천·강원 ('14) → 서울·울산 ('15)
- 지역대학, 방송사, 관련업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디어센터를 창의적 방송콘텐츠 생산을 위한 요람으로 성장
 - 초·중·고 대상 '미디어 거점학교', 대학과 연계한 '전공과정' 등 체계적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재능있는 '미디어 꿈나무' 조기 발굴·육성
 - 방송영상 장비, 시설 및 소프트웨어 등 확충

② 애니메이션 활성화

- (주시청 시간대 편성) 애니메이션이 어린이 주시청대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야·새벽시간 (22~7시) 편성시, 방송평가에서 제외
- (제작 확대) 공영방송인 KBS·EBS의 유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 (EBS 제작비 : '13년 12억원 → '14년 24억원)

③ 상생의 콘텐츠 제작 생태계 조성

- (고비용 구조개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드라마 제작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고액 출연료·작가료 개선 추진
 - ※ 정부, 방송사, 드라마제작사, 독립제작사 등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 ('13. 8~)
- (재원 확충) 방송사에게만 허용되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게도 허용 (방송법 개정)하여 외주제작사의 제작재원 확충
- (공정경쟁 체계 구축) 외주제작 편성비율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공정경쟁 환경 구축

④ 창조 경제의 동력, 광고산업

- (광고 지원)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미디어랩을 통한 **방송광고비 70% 할인 확대** ('14년 200여개사)
 - 할인 대상·매체 확대 (해외진출 기업, 인터넷 등) 추진

③ 미래를 향한 발돋움, 차세대 방송

◆ 방송 플랫폼을 통해 창조경제를 확산·견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매체 환경에 부합하는 차세대 방송 서비스 도입

① 차세대 UHD 방송

- 對중국 (가격)·일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UHD(HD보다 화질이 4~16배 선명한 Ultra HD)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미래부 공동)
 - 지상파·유료방송사, 콘텐츠 업체, 가전사 등과 협력
- 방송콘텐츠中 80% 이상을 생산하는 지상파의 **UHD 방송 도입** 여건 검토를 위하여 실험방송 실시 (700MHz 대역 활용 : 미래부 협의)

② 지상파 다채널 방송 (MMS)

- 시청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상파 다채널 방송* (MMS) 정책 방안 마련
 - 시청자 복지 증진, 다문화 방송, 외국어 교육채널 등을 위한 **무료 방송 검토** (KBS·EBS 중심)
 - 수도권 실험방송 ('14. 1월부터 실시중)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안 수립**
- * 디지털 영상 압축기술을 활용하여 1개 채널 (6MHz)을 2개 이상 채널 (HD, SD, 오디오 등)로 분할해서 방송을 전송하는 기술 (Multi-Mode Service)

4 방송플랫폼의 세계화

◆ 단편적인 콘텐츠 수출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한류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류 플랫폼으로서 국내 방송채널의 해외 송출 추진

① 방송콘텐츠 수출 재점화

- 지상파 등의 드라마, K-POP, 애니메이션, 방송포맷 해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 정부와 **MOU** 추진
-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14. 12)’와 연계하여 한류 콘텐츠 로드쇼를 개최 (미래부, 외교부 협의) 함으로써 한류 확산의 촉매제로 활용
 - 지상파, 종편 등 우수 콘텐츠를 **10개국** 정상 및 참석자들에게 소개
- EBS의 국제 다큐 페스티벌 등 지원

② 해외 방송채널 확대

- 프로그램 수출 중심의 한류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어 국내방송 채널 (아리랑 TV · KBS 월드)이 **외국방송에 송출될 수 있도록** 지원
 - ※ 고위급 회담·면담, 기관 방문시 의제로 채택하는 등 세일즈 외교 확대
 - 유럽 · 남미 · 중동 · 동남아 등 주요방송 진출 확대

③ 국가대표 글로벌 방송 추진

- 해외 방송채널의 장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KBS 월드 : 콘텐츠 경쟁력, 아리랑 TV : 언어·문화 이해력

2.

방송의 신뢰성 제고

◆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구현

정책 과제

- ① 광고에 영향 받지 않는 참 공영방송을 확립하고, ②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진 종합편성 채널의 공공성을 확보
- ③ 모든 시청자가 차별없이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주요 성과

①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 공적 책임 구현에 중점을 두고 KBS 등 38개 지상파 사업자 (262개 방송국) 재허가 ('13. 12)

② 종합편성 채널의 공공성 확보

- 지상파 재허가 심사 수준으로 강화된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기본 계획 수립 ('13. 9)
- 사업계획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해 사업자별 과징금 3,750만원 부과 ('14. 1)

③ 보편적 시청권 보장

- (장애인 시청권 보장) 자막·수화·화면해설 방송 제공 사업자 확대
 - ▶ 지상파('12년 61개사) → 지상파 + 유료방송 ('13년 153개사)
 - 장애인 방송수신기 14,898대, 총 186,291대(누적) 보급
- (보편적 시청권) 방송사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동계 올림픽 순차 편성 권고

장애요인 및 개선할 점

- (공영성) 공영방송인 KBS의 광고수입 비중 (41%)은 수신료 (39%) 보다 많아 시청률 경쟁에 편승한 프로그램이 양산될 우려가 있으며 광고주의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를 지님

KBS 수신료 비중 ('12년)

39% * 광고 : 41%

vs.

주요 해외방송 수신료 비중 ('12년)

BBC(英) 71%, FT(佛) 82%, ZDF(獨) 85%

- (공공성) 시청률 증가 등 매체 영향력이 증가된 종합편성 채널의 저품격 언어 사용 방지 등 공적 책임 확보가 필요
 - TV·신문 등 전통 매체 중심에서 PC·스마트폰 등 새로운 매체의 이용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매체 영향력에 대한 조사가 미흡
- (시청자 복지) 장애인 수신기를 18.6만대 보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의 보다 적극적이고 조속한 지원 필요

①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 KBS 수신료를 인상하여 양질의 콘텐츠 제공, 사교육비 절감 등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확대

① KBS

-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광고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참 공영방송 확립
- 다문화 가정, 소수자·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문화 발전, 한류 확산 관련 프로그램 제작 확대

② EBS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상파 다채널 방송 실시 등 채널 확대 추진
 - ※ 1인당 사교육비 : 월 평균 23.6만원
 - 초등 : 21.9만원, 중등 : 27.6만원, 고등 : 22.4만원
- 어학 등 학습 콘텐츠 지원 증액 ('14년 15억원)

2 종합편성 채널의 공공성 확보

◆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 등을 통해 공공성 보장에 노력

① 재승인 추진

- (재승인 대상) TV조선·JTBC·채널A('14. 3~4월 만료), MBN('14. 11월 만료)
- (심사계획) 심사위원장 (평가 미참여), 전문가 14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중점 심사
- (재승인기준) 1,000점 中 650점 미만 (650점 이상이라도 공적책임, 프로그램 기획·편성 관련 심사사항 50% 미달시)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② 공적 책임 강화

- (콘텐츠 투자 확대 유도) 철저한 이행실적 점검 등 실시
- (방송 심의강화) 종합편성 채널의 막말 사용 등에 대해 심의 강화
- (미디어랩 설립) 종편사업자의 미디어랩 설립 (TV조선·채널A·JTBC : '14. 1분기, MBN : '14. 하반기) 으로 방송 편성과 광고수주 분리

3 보편적 시청권 보장

◆ 장애인·외국인도 불편없이 방송시청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 국민 관심행사 (올림픽, 월드컵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① 장애인 시청 접근권 보장

-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TV 시청에 불편 없게 수화방송 화면 크기를 조정하거나 제거가 가능한 서비스 개발·시험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 '17년까지 장애인 방송수신기를 100% (8.1만대) 보급

② 국내 외국인 방송서비스 확대

- 국내 지상파 방송중 외국인의 관심도가 높고 국내 정착에 유용한 뉴스·드라마 등의 VOD에 대해 영·중·일 자막을 제공
-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본국 방송 채널 연결

③ 지상파 스포츠 중계권 분쟁 예방

- 브라질 월드컵 (6월), 인천 아시안게임 (9월)시 공동중계와 순차편성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여 다양한 국민들의 시청권 보장

※ 지상파 3사 공동중계·순차편성 합의 ('14. 1)

④ 스마트 미디어 시청점유율 조사

- 새로운 TV시청 패턴을 반영하기 위하여 **TV·PC·스마트폰**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실시간·비실시간 시청시간을 조사

3.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 ◆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이 증진되고, 이용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송통신 시장 구현

정책 과제

- ① 개인정보 걱정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② 이용자를 차별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근절
- ③ 어린이·청소년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주요 성과

①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법규를 위반한 **76개** 사업자를 적발·시정 조치하고,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서도 2.1억원의 과징금 부과

②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

- 특정 사업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 경쟁 사업자의 확대 지급을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를 막기 위하여 과열 주도 사업자 (KT) 선별 영업 정지 (7일) 및 최대 과징금 부과 (1,800억원)

③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및 선플 운동 전개
- 10만명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13년)

장애요인 및 개선할 점

-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통은 지속되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의식 및 시스템은 미흡하여 유출 사고가 근절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 유출로 불법 스팸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 우려

- **(단말기 보조금)** 강력한 단속·처벌에도 불구하고 게릴라식 보조금 등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가 지속
 - 불법 단말기 보조금의 근절을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조사인력 부족으로 불법 행위에 즉각적 대응 곤란
 -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내용
 -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공시제 도입, 조사 대상을 제조사유통점으로 확대 등

- **(인터넷 이용 문화)** SNS 이용 증가로 악플, 사이버 왕따 등 사이버 폭력이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 ※ '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 29%, 피해경험 30%
 - 대출·도박 등의 악성 스팸과 SNS·게시판 등을 통한 신종스팸이 증가하는 추세

1 개인정보 보호

◆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주민번호 파기를 지원하는 한편, 유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과징금 강화

* 금융위(금융기관), 안행부(공공기관, 오프라인), 방통위(인터넷 업체 등)

① 주민번호 파기 지원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중인 주민번호 파기의무가 시행 (14. 8)됨에 따라 웹사이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원*을 병행

* 주요 웹사이트 : DB내 주민번호 수집·이용 및 보유여부 조사·시정조치

* 영세 웹사이트(9천개) : 주민번호 파기를 위한 기술적 지원

②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자 등을 집중 단속 (경찰청 공조)하고, 개인정보 판매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 (방심위 협조)

③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강화

- 개인정보 유출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보호조치 위반과 침해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과징금 부과

○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보호조치 위반과 침해사고와의 인과 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

○ 관련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 부과

※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14. 6월 국회 제출 예정)

②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

◆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부추기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억제하여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한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성장 추진

① 행정적 조치

- 불법 보조금 관련 과열 주도 사업자를 엄정 제재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 (매출액의 1%→ 2%)
- 온·오프라인에서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보조금 모니터링을 강화
 - * 모니터링 표본 수 확대 (1,200개→2,700개)
 - * 지방 (주1회→주6회) 및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평일 주간→24시간 상시)

② 법·제도 개선

- 국회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위해 미래부와 긴밀히 협력
 - 동법 제정시 보조금 상한기준, 과징금 산정기준, 긴급중지명령 등과 관련된 시행령·고시 제정 (미래부 공동)
-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규제대상 확대에 대비하여 조사 인력 확충 강구 (안행부 협의)
 - * 유통법 제정시 제조사와 5만여 유통점이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됨

3]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 어린이·청소년도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스팸을 차단하여 개인정보 불법 활용 방지

① 남을 배려하는 인터넷 윤리 확산

- (선플 운동 확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캠페인·민간단체와 연계한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을 유도
 -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선플 한류) 인터넷 선플 운동을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는 『선플 한류』를 통해 국가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사이버폭력 예방) 방송·학교·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올바른 SNS 활용교육 실시

② 불법스팸 강력 차단

- (스팸 특별단속)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팸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 스팸 집중 단속
 - 불법 대출 스팸을 전송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서울시 공조)
- (신종스팸 대응) SNS상의 스팸 실시간 차단 및 간편 신고 시스템 구축, 게시판 스팸 차단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신종 스팸 근절

IV.

국정과제 및 비정상의 정상화

1. 국정과제 이행 사항

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 포털 등의 임시조치 남용에 의한 표현의 자유 위축을 방지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기능 강화
 - 임시조치에 대한 게시자의 이의제기권 신설, 개인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법률 개정 추진
 - ※ '13.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 원스톱 피해구제센터를 구축

②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개인정보 유출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종료후, '14. 6월 국회 제출 예정

③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 동일한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케이블·위성(방송법)과 IPTV(IPTV법)에 대한 규제 일원화로 '동일시장 동일규제' 실현
 - IPTV를 유료방송사업자에 포함하는 사업자 분류체계 개선, 소유 제한·편성규제 개선 등 '방송법'과 'IPTV법' 통합법안 마련

2. 비정상의 정상화

① 유사보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허가 또는 승인을 받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PP에게만 보도가 허용되며, 종교·교통라디오, 일반PP 등의 보도는 금지
- 대부분의 종교·교통라디오와 다수의 신문사·방송사 소유 일반PP채널에서 정치보도를 제공 중이며, 일부 SO는 전국보도 제공

□ 정상화 방안

- 지난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금지되는 프로그램 유형을 규정하는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종교라디오는 역사성을 고려)

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운영 정상화

□ 현황 및 문제점

- KOBACO가 보유중인 프레스센터, 방송회관 등 고정자산을 각각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에 무상으로 임대중

※ KOBACO가 적자 ('12년 41억원, '13년 50억원)임에도 흑자 기관에게 무상 임대중

□ 정상화 방안

- (수익증대) 프레스센터, 방송회관 무상 임대 관행 개선
- (비용관리) KOBACO의 경영 혁신을 위해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복리 후생비 축소 조정

V.

기대 효과

-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광고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원이 안정화됩니다.**
 - 국내 방송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우리 방송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추가재원은 양질의 콘텐츠와 서비스로 시청자에게 환원되고, 한류 재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 BBC·NHK에 견줄만한 세계적 수준의 고품격 다큐멘터리가 안방으로 찾아가고, EBS에서는 유아 정서함양과 초중등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전문 프로그램** 방송이 늘어납니다.
 - 다양한 정보 욕구를 만족시키는 **다채널 방송**과 초고화질 **UHD** 방송이 국민에게 선보입니다.

- **보고 즐기는 시청자에서 누구나 직접 만들고 나아가 세계적인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 대전·인천·강원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관하여 콘텐츠 제작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고객(신규 vs. 기변), 시기(졸업·입학철 vs. 여름 비수기)에 따라 천차만별인 **이동전화 단말기의 가격차이가 줄어듭니다.**
 - 주민번호 유출 걱정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VI.

추진 일정

목표	주요정책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창조 방송 구현과 세계화	한류를 위한 재원 확보 (광고제도개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콘텐츠 미디어 센터 확충	서울·울산 지자체 협의	강원·대전 개관	인천 개관	서울·울산 공사 착수
	기반 확충 외주지원· 애니 활성화	고액 출연료· 작가로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확대 고액 출연료· 작가로 개선방안 마련		방송평가 실시 외주제작 공정경쟁 체계 구축방안 마련
	차세대 방송	MMS 실험방송	UHD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MMS 정책 방안 마련
	방송플랫폼 세계화	해외 플랫폼 송출 지원	계속	계속	한-ASEAN 방송콘텐츠 로드쇼
방송의 신뢰성 제고	지상파방송 공적책임제고	수신료 조정(안) 검토의견 국회제출			
	중편채널 공공성 확보	TV조선 JTBC, 채널A 재승인 심사	MBN 재승인 신청서 접수		MBN 재승인 심사
	보편적 시청권 보장	장애인 방송 제작비 지원	장애인 수신기 신청서 접수	스마트 수화방송 기술표준 개발	스마트 미디어 시청점유율 조사
국민 행복,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주민번호 파기 기술 지원(연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제출	주민번호 파기 실태 점검	
	단말기 불법보조금 근절	보조금 모니터링 확대(연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후속시행령 및 고시 마련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연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신종 스팸 대응방안 마련